

1.

2. [정답] ④

의원내각제의 경우 입법부 의원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예를 들어, 일본 중의원은 4년), 임기도중 의회가 해산을 당한 경우에는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정답] ③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4. [정답] 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므로, 달러화를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부담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차입한 경우,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면,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100,000만원이 필요하지만, 1달러에 500원으로 하락할 경우, 상환하기 위해서는 50,000만원만 있으면, 달러화로 환전하여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정답] ③

제시문은 종속론에 따른 분석이다. 1960년대 중남미 학자들이 **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제기**하였다. **제3세계는 미(未)발전이 아니라 저(低)발전의 상태이라고 보며**, 후진국의 ‘**저발전**’ 이유는 중심적인 선진국이 주변부인 후진국을 **착취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중심부가 주변부를 **원료공급지와 상품 판매지로서 착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변부가 아무리 근대화되었다 하더라도 중심부로부터 착취당하면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커피 한잔 마시는 값이 밥값보다도 비싸지만, 엄청나게 소비되고 있다. 그렇다면 커피를 생산하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는 돈을 많이 벌어야 정상이다.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아주 싼 값에 커피 원료를 구입해 비싼 값에 되파는 선진국의 기업들 때문이다. 직접 커피를 생산하는 주변국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중심부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6. [정답] ②

①헌법 제67조 제3항

②공선법 제56조

- | |
|-------------------------------------|
|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
|-------------------------------------|

③공선법 제47조 제3항

④공선법 제53조 제1항

7. [정답]③

x계의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총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①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감소를 초래한다.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②소득수준의 증가는 수요증가를 초래한다.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8. [정답] ②

A:완전경쟁시장, B:독점적 경쟁시장, C: 과점시장 D: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이 제품차별화이다.

9. [정답] ④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입법부작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지, 모법인 군법무관임용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동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권리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필요로 하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0. [정답] ①

그림은 정치문화의 이념형을 현실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산업사회모델은 참여형이 두텁게 분포해있는 반면, 권위주의적 산업사회모델은 신민형이 두텁게 나타난다. ㉠ 신민형 ㉡향리형 ㉢참여형이다.

11. [정답] ③

사회적 소수자의 판단기준은 숫자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사회적 차별, 집합적 정체성 이 사회적 소수자의 판단기준이 된다.

12. [정답] ①

확대재정정책 또는 확대금융정책이다. 경기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다.

13. [정답] ①

김해시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분당구는 아니다. 분당구가 속해있는 성남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소환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광역 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이에 해당된다. 특별시는 서울 하나뿐이며 광역시는 광주,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가 속한다.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법 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
--

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4. [정답]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이 있는 사람이 취소할 경우,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경우이다.

15. [정답]①

(가)양적 연구방법 (나)질적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은 ㄱ, ㄴ을 강조한다.

16. [정답] ③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① 정당법 제22조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② 정치자금법

제31조 (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④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②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6조 (피선거권)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

거권이 있다.

외국인에게는 일정한 경우 선거권은 인정하지만, 피선거권은 '국민'에 한정한다.

17. [정답] ②

참여재판제도는 다음과 같다.

- ㉠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월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 배심원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 그밖의 대상사건은 7명으로 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한다.
- ㉢ 적용대상 범죄
-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배임수재 등의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이다. 단,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피고인의 의사확인제도).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 평결의 효력
- 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1차평의는 배심원만에 의한 만장일치제도 진행하며, 2차평의는 다수결로 한다.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무죄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18. [정답] ④

A :주식, B:채권, C:예금

채권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주식은 그렇지 않다. 기대수익률은 주식에 높다. 주식은 위험이 높은 반면 기대수익률도 높다. 정부와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것은 채권이다.

19. [정답]③

노인부양비 = 65세 이상인구/(15~64세 이하의 인구)*100,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인구/14세 이하인구*100

2000년도 고령화지수가 33%이므로, 노인인구는 유소년인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20. [정답]④

① T년의 부모 계층 세습정도 : 상[80/100], 중[160/200=80/100], 하층[85/100]이므로, 하층이 제일 높다.

② 세대간 상승이동이 많다.

세대간 상승이동	[중→ 상 :30]+[하→중, 상 : 10] = 40
세대간 하강이동	[상→ 중, 하 :10]+[중→하 : 10] = 20

③ 모두 다이아몬드형이다. [T] 상 95, 중185, 하120, [T+10]상 125, 중172, 하103

④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은 T년도에 10명이다. 만약 이들이 전부 중하층으로 떨어졌다면, 중하층인 자녀들 중 30명이 상층으로 이동한 것이 된다. 만약 T년도 10명이 전부 상층을 유지하고 있다면, 중하층인 자녀들 중에서 20명이 상층으로 이동한 것이 된다. 결국 20 최소 20명 최대 30명이 상층으로 이동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